

野 갑질 계속하면 내년 大選이 심판대 될 것

야(野) 3당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단독 처리 여파가 국회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당 등 야 3당은 여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자기들끼리만 국감을 진행하겠다고 한다. 국정을 팽개친 강대강(強對強) 대결이다. 이 정부 들어 4년 가까이 반복된 일이다.

장관에게 문제가 있으면 국회가 불신임의 뜻을 모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은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기능 중 하나다. 대통령은 그 뜻을 수용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이번엔 해임안 자체가 거야(巨野)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식의 일방 독주였다. 해임안이 통과됐으니 당장 물러나라는 데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강행 처리한 뒤에 국정 파행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야당이 이렇게 밀어붙여야 할 만큼 절박하고 중요한 사정이 뭐였는지 납득할 수 없다. 많은 사람이 안보·경제가 모두 위기 상황인데 야당이 '힘자랑'이나 하는 것을 보며 혀를 차고 있다.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재임 시 업무 수행의 문제점을 대상으로 한다. 취임한 지 얼마 안 되는 김 장관은 아직 해당사항이 없다. 인사청문회 때 지적된 문제들은 야당 의원들도 상당 부분 해명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자신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즉시 사과도 했다. 그런데도 끝까지 물고늘어지는 것은 야당 권력의 폭력적 행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야권은 해임 건의안을 철저히 하는 조건으로 새누리당에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어머니연합 자금 지원의

혹 청문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정치적 흥정을 시도했던 것이다. 정부가 요청한 입법 현안에 관계없는 사안을 연계시키는 것은 야당의 고질병이다. 그래도 소야(小野)일 때는 '오죽하면...'이라는 동정이라도 받았다. 거야(巨野)가 먼저 장관 해임안을 제기해놓고 그걸 빌미로 정치 흥정을 한다는 것은 갑(甲)질일 뿐이다.

더민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의 편파적·정파적 국회 운영은 심각한 수준이다. 국회의장은 여야 갈등을 중재·관리하면서 국회를 원만하게 끌고가는 자리다. 중립이 생명이다. 그런데 정 의장은 마치 야당의 행동대 같다. 정 의장은 24일 새벽 여당 원내대표에게 서류 통보만 한 뒤 의사 일정을 변경했다. 여당은 정 의장을 직권남용 등으로 형사고발키로 했다. 친정인 여당으로부터 온갖 비난을 들으면서 중립을 지키려 고민했던 전임 국회의장들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정 의장은 정기국회 개회사에 사드 문제 등에 대한 개인 정견(政見)을 담았다가 하루 넘게 국회 파행을 가져오기도 했다.

박 정부 들어 더불어민주당 등이 국회에 제출한 장관 해임 건의안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법무·교육부장관 등에 대해 네 번 냈다가 모두 폐기됐고 이번에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가결 시켰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거야(巨野)를 만들어 준 것은 대통령의 오기·독선을 견제하라는 뜻이었는데 야당은 힘을 얻자마자 똑같이 오만해졌다. 아마도 정부의 무능과 비리로 내년 대선(大選)도 파놓은 당상이라고 여기는 듯하다. 야권이 이번과 같은 갑질을 한두 번만 더 하면 내년 대선은 정부가 아니라 야당 심판대가 될 것이다.

농민 백남기의 안타까운 죽음... 폭력시위-강경진압 끝내야

작년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1차 민중 총궐기 투쟁대회'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농민 백남기 씨가 어제 끝내 세상을 떠났다. '노동 개악 중단'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요구하며 도심을 마비시킨 폭력 시위와 강경 진압 끝에 한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됐다.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백남기 농민의 패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경찰의 과잉 진압이 사태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주장해 왔다. 야당 의원들도 12일 열린 '백남기 농민 사건 청문회'에서 경찰이 경찰 버스로 차벽을 쌓아 시위대의 과격한 대응을 불렀고 물대포 사용 지침을 어겼다고 질타했다. 어제도 대책위는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처벌 없이는 장례를 치를 수 없다"고 밝혀 야권과 함께 정치적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쇠파이프와 핫불이 난무했던 당시 시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53개 단체가 주도하며 청와대 진출까지 시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7월 "일부 시위대가 밧줄로 경찰 버스를 묶어 잡아당기고 경찰이 탄 차량 주유구에 불을 지르려 시도하는 등 폭력적인 양상이 심각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을 정도다. 다만 경찰이 물대포를 가슴 아래로 쏘아 한다는 지침을 어긴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작년 12월 '2차 민중 총궐기 대회'에선 폭력이 사라진 이유도 민심이 돌아섰기 때문이었다.

백 씨의 희생을 끝으로 폭력 시위와 강경 진압의 악순환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다. 청문회 때 공식 사과를 거부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사인 규명을 떠나 고인의 영전에 도의적인 사과를 올리길 바란다.

경향신문

국회 무시한 대통령, 국회 포기한 여당, 국정 팽개친 정권

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회의 건의를 거부했다. 그제 장차관 위크숍에서 "비상시국에 해임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다"고 하더니 어제는 정영국 대변인을 통해 수용 불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대통령이 국회가 결의한 장관 해임안을 거부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상정한 정세균 국회의장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여론 무시와 편법 국정운영, 그리고 여당의 무책임한 대야공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암담할 뿐이다.

청와대는 김 장관에 대해 제기된 의혹이 청문회 과정에서 모두 해소된 데다 임명된 지 한 달이 안된 김 장관의 해임을 결의한 것은 정치공세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비상식적으로 낮은 전세와 특혜 금리 등이 드러나 고위공직자로서 결격사유가 명백했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김 장관의 임명을 강행, 청문회 무용론까지 불러일으켰다. 임명장을 받은 김 장관은 대학 동문회 게시판에 지방대 출신의 '흙수저'여서 부당하게 비판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영똥한 화풀이로 장관으로서 자질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했다.

박 대통령의 여론 무시도 김 장관 해임안 통과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해임안 처리 전날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를 둘러싼 야당의 의혹 제기를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라고 하자 비판 여론이 비등했다. 김 장관 해임안에 미온적이었던 국민의당 의원들이 박 대통령의 발언

에 자극받아 대거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 해임안 가결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편법적인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표 수리도 야당을 자극했다. 이 감찰관은 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모금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감찰을 벌인 일이 알려져 국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한 달 가까이 방치했던 이 감찰관의 사표를 곧바로 수리했다.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의 증인 채택은 여야 합의 사항이라는 점을 악용해 그의 증언을 막기 위해 꼼수를 쓴 것이다. 결국 이번 해임건의안은 김 장관의 개인 문제뿐 아니라 박 대통령의 독선적인 국정운영이 결부되어 여론이 악화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국가 위기와 혼란이 있다면 그것은 국정 최고책임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일이므로 사과·반성하고 국정을 바로잡으면 될 일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전혀 그런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그런 박 대통령을 비판한다고 대통령 흔들기로 보는 것은 독선이다. 문제는 이런 독선이 새누리당의 정세균 의장 고발 및 국회의 사일정 전면 보이콧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국가 혼란과 여야간 대립은 대통령의 독선에서 출발하고 있다. 국회의 해임건의안은 국회의 뜻이자 시민의 의사이다. 그 때문에 역대 대통령도 해임건의안을 모두 수용했던 것이다. 박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 새누리당도 집권당으로서 국회 파업이 합당한 일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회를 무시하고, 집권당은 국회를 포기한다면, 과연 이들이 나라를 책임질 자격이 있는지 물을 수밖에 없다.

사과도, 책임도, 처벌도 없는 백남기 농민의 죽음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졌던 백남기 농민이 25일 별세했다. 살인적 진압에 쓰러진 지 317 일째이고, 안타깝게도 칠순 생일이 하루 지난 날이기도 하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고인의 삶은 희생과 헌신이었다. 유신 독재에 맞서 싸우다 고향인 전남 보성으로 돌아가 30년 넘게 농사를 지으며 좁은 이웃과 생명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 올곧고 정갈한 생활 위에 평화·생명·공동체 운동을 쌓아갔던, 함께 실천하는 농민이었다. 고인은 정부의 농업 경기 정책 속에서 외면당하고 낮은 쌀값과 밭에 허덕이던 한사람의 농부이기도 했다. 몇 년째 쌀값이 폭락해도 대통령 선거 때의 쌀값 보장 공약을 모른 척하는 정부가 야속했던 농민이 그 혼자만은 아니었을 터이다. 고인은 농민의 어려운 처지를 항의하려 동료 농민들과 함께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 그러다 변을 당했다.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명백한 국가폭력의 결과다. 경찰은 아무런 위협이 될 수 없는 예순아홉살 맨손의 노인을 직접 겨냥해 고압 물대포를 쏘았다. 경고방송이나 예비적 분사도 없었고, 직사살수 때는 가슴 아래를 겨냥한다는 안전지침도 무시한 채 가까운 거리에서 바로 머리를 겨냥했다. 심지어 쓰러진 이를 구호하는 응급차에까지 물대포를 쏘았다. 잔인하기 짝이 없는 야만적 행위였다. 법원도 경찰의 이런 행동을 '위법'이라고 판단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경찰의 잘못을 확인

했다. 공권력 남용은 물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까지 추궁할 만한 범죄행위였다.

그런데도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책임자 누구도 사과는커녕 가족을 찾아 위로하지도 않았다. 정부의 야멸찬 태도는 백남기 농민이 세상을 떠날까지도 변함이 없다. 고인의 죽음에 애도의 뜻을 밝힌 정부 책임자는 아직 아무도 없다. 국회 청문회에서 사과를 거부했던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은 고인의 별세에 대해서도 "노코멘트 하겠다"며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거부했다. 불통·무능 정부에 대한 항의를 살인적 진압으로 가로막더니 그로 인한 희생까지 냉담하게 외면한 것이다. 오히려 경찰은 고인이 숨진 서울대병원 근처에 수백명의 경찰을 배치하는 등 여전히 '치안'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비인간적인 정부를 과연 정부라고 부를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박근혜 정부가 져야 한다. 이를 어물쩍 넘기려 해선 안 된다. 경찰 지휘부와 국가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까지 제기돼 있는 터다. 백남기 농민을 죽게 한 국가폭력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고 합당한 조치를 내릴 책무는 검찰을 비롯한 국가에 있다. 일부의 의심대로 경찰 폭력 때문이 아니라고 둘러댄다 해도 믿을 국민은 없다. 이번에도 책임 규명과 처벌에 실패하면 국가와 공권력의 신뢰 실추는 피할 수 없다.

전망

이석수 입 막고 거짓말로 '미르' 꼬리 자르는 꼼수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의 '권력형 비리' 의혹을 어떻게든 덮으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3일 두 재단의 대기업 출연 과정과 관련해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내사했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를 전격 수리했다. 검찰 수사를 이유로 이 감찰관의 사표 수리를 한달이 다 되도록 미뤘던 청와대가 느닷없이 사표를 수리한 이유는 뭘까. 이 감찰관은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하기로 돼 있었다. 국회에 출석하면 자신이 아는 내용을 사실대로 떳떳하게 증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고 한다. 이를 막으려 부랴부랴 사표를 수리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비선 측근' 최순실씨나 안수석 대신 엉뚱하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재단 설립의 '주역'임을 자처하고 나선 것도 쓴웃음을 짓게 한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논의해 모금했다고 주장하지만, 4대 그룹 등 어느 기업도 그런 재단의 설립을 제안한 적

이 없다고 한다. 지난해 여름부터 기업들이 논의를 시작했다는데 실은 그 이전부터 미르재단이 있었고, 이사장 선임 과정 등도 전경련 주장과 다르다. 그런 구멍 송송 뚫린 '말따스기'로 진실을 감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착각이다.

전경련은 문제 된 정관의 개정, 허위로 작성된 회의록 등 관련 자료의 점검, 이사진 교체 등에도 나섰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퇴임 후 권력 유지 창구로 기획됐던 일해재단도 1988년 강제 모금 등의 비리 의혹이 드러나자 정관 개정 등으로 범죄행위를 은폐하려 한 바 있다. 전경련이 그런 증거인멸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유언비어 의법처리'를 언급하는 등 의혹 제기를 막으려는 정권 차원의 '으름장'도 무성하다. 한편에서는 입을 틀어막고 다른 한편으로는 거짓말로 의혹의 꼬리를 자르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 등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

세계일보

김영란법 혼선 최소화에 성패 달려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공무원과 공공기관·사립학교 종사자, 언론인이 법 적용 대상이다. 법 적용 대상 기관이 4만919개에 달한다.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를 금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둔다.

법 적용 대상이 워낙 광범위한 데다 '직무 관련성' 같은 핵심 개념이 엄밀하게 정의되지 않아 법 적용의 혼선이 우려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방대한 법 해설자료를 내놓았지만 일부 사례에 대해선 아직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법 적용 대상자뿐 아니라 민간 기업 임직원 등이 지금도 법 해설자료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이러한 시행 과정에서 적잖은 문제점이 발견될 것이다. 규제가 과도하다는 불만소리도 곳곳에서 나온다. 공직사회 등에서 벌써부터 모임이나 약속을 취소하는 경우가 줄을 잇는다. 오늘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선 의원 식사비를 국회에서 자체 결제한다고 한다. 관공서 부

근 음식점 등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되 혼선은 최소화하는 데 김영란법의 성패가 달려 있다. 정부와 국회는 법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는 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삭제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부터 복원해야 할 것이다. 사회 전반에 거품이 사라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제적 충격을 줄이는 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2018년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 기준을 다시 검토할 방침인데, 그 전이라도 필요하다면 보완해야 할 것이다.

김영란법은 부패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법이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실험이기도 하다. 점대문화나 조직문화에 일대 변혁을 몰고올 것이다. 우리 모두 몸가짐을 바로 해야 할 때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매일경제

건보료 민원 6700만건, 언제까지 개편 미룰건가

지난해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이 6725만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 숫자가 고작 5107만명인데 건보료 민원이 6725만건에 달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경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건보료 개편을 제외할 만큼 의지가 없다. 보다 못한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1일 "정부가 건보료 체계 개편을 꺼리는 것은 (대선)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을 정도다.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가 문제가 많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문이 없다. "생활고로 동반 자살한 '송파 세 모녀'는 월 5만원이 넘는 건보료를 낸 반면 수천만 원 연금 소득이 있는 나는 직장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가 0원"이라는 김중태 전 건보공단 이사장의 고백은 제도의 맹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퇴직·실직 후 소득이 줄었는데도 보험료는 2~3배 뛰어 '건보료 폭탄'을 맞는 가입자도 부지기수다. 자연히 탈법과 편법이 횡행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지난해 6월

기준 2000만명을 넘었고 퇴직 후 보험료를 덜 내려고 위장취업해 적발된 사람이 최근 5년간 8600명에 달했다.

건보료 개편의 방향과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부유층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해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는 불합리를 개선하고 저소득층이나 퇴직자에게는 터무니없는 건보료를 물리지 않도록 종합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바꾸자는 것이다. 문제는 안 내던 건보료를 내야 하는 피부양자들과 건보료가 오를 수 있는 고소득층의 반발이다. 정부가 미적거리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해마다 폭증하는 건보료 민원에서 보듯이 국민적 분노가 폭발 직전이다. 단기적으로 현행 틀 안에서 임대·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 등재를 제한하거나 퇴직·실직자의 경우 건보료 부담을 낮추는 등의 임시 조치라도 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대선을 앞둔 포퓰리즘 광풍이 닥지기 전 올해 안에 건보료 개편을 마무리 짓기 바란다.

해임안 파문 김재수 장관, 정국경색 막기 위해 사퇴하라

24일 새벽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가결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수용 불가를 밝혔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을 무너뜨려 레임덕을 초래해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야당의 대선 전략”이라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했다. 야당은 대통령의 해임건의안 수용을 촉구하며 단독 국감도 불사할 태세다. 청와대와 야당, 야당이 강경 대응으로 치달으면서 자칫하면 대선까지 15개월간 서로의 발목을 잡는 일이 계속될 판이다.

박 대통령은 24일 장차관 워크숍에서 “비상시국에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다”며 야권을 비판했다. 헌법 63조 1항은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해임 건의의 사유는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 과거 5차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통과 사유가 모두 실정(失政)이었던 데 비춰볼 때 더불어민주당이 김 장관 취임 다음 날인 5일부터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버는 것부터 사실상 박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공세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국회의 해임 건의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박 대통령이 김 장관 지키기에 나선 것 역시 공감하기 어렵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고 했지만 청문회 당시 김 장관은 1%대의 농협 금리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채 국민 앞에 사과까지 했다. 23일 오후 해임건의안 본회의 상정 뒤 새누리당이 국무위원들에게 답변을 길게 할 것을 요구하는 등 밤 12시까지 시간을 끌어 표

결을 무산시키려 한 것도 집권당답지 못하다. 야당 출신인 정세균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 없이 24일 0시 차수 변경을 통해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친 것도 편파적 진행으로 보인다. 결국 자질이 의심스러운 장관에 여당답지 못한 여당과 의장답지 못한 의장, 합자랑에 나선 거야(巨野) 3당이 정국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형국이다.

20대 총선을 통해 여소야대 체제가 정립된 것은 여야가 더는 싸우지 말고 협치를 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었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여야 모두 타협 없이는 어느 법안도 처리할 수 없게 됐다. 그런데도 여야가 김 장관 거취를 놓고 ‘강 대 강’으로 맞서는 것은 국가안보와 경제의 복합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한 배신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새누리당이 국정감사까지 거부하겠다는 것은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감 출석 등 청와대에 깔려온 사안을 피하려는 꼼수로 비친다.

지금도 ‘비상시국’이라면 김재수 장관 문제가 국정을 경색시킬 만큼 중요한 일인가. 내년 대선을 노려 서로 샅대질을 하는 모습에 국민은 절망의 한숨만 나올 뿐이다. 박 대통령이 솔선해서 불통과 오기의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여야 협치를 선도해야 한다. 억울해도 야당의 공세에 밀리면 끝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회를 존중하는 것으로 여기면 된다. 김재수 장관이 먼저 사임 의사를 밝혀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박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야 정국이 풀릴 수 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큰 정치다.

중앙일보

견제받지 않는 검찰권, 권한 분산이 답이다

검사 비리 의혹이 잇따르면서 검찰 개혁이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검찰권 견제가 개혁의 핵심이란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본지가 22~26일 기획으로 보도한 ‘2016년 대한민국 검사 대해부’ 시리즈는 견제받지 않는 검찰권의 문제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보여주었다.

본지 취재 결과 수사권·수사지휘권·기소권을 한 손에 쥔 검찰의 비대한 권한이 한국 사회는 물론 검사 자신들에게도 크고 작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2.3%가 검찰을 가장 권한이 강한 사정기관으로 꼽았다. 이런 가운데 검사들은 월 평균 261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등 고된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일부 검사의 뇌물·향응·스폰서 의혹은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다. 막강한 검찰권이 대다수 검사를 짓누르고 있는 데 반해 소수의 잘나가는 검사에겐 권한 남용의 빌미가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86.5%의 시민이 검찰권 견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민정부 출범 이후

검찰은 사실상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문민정부 이전까지 검찰권을 견제했던 안기부(국정원 전신)·기무사령부 등 정보기관이나 군(軍)의 힘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역대 정부마다 검찰 개혁이 추진됐지만 별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검찰이 바로 서고, 검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으려면 검찰이 가진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당장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어렵다면 일부 범죄에 대한 독자적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줘야 한다. 법무부 주요직의 비(非)검사 출신 임용을 확대하는 등 법무부의 검찰 견제 기능을 살릴 필요가 있다. 검찰에 대한 청와대의 입김을 최소화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비리 예방을 위한 공직윤리·인성 교육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사법정의를 위해 결코 없어서 안 될 조직이다. 검찰과 검사들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현 상황은 누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가시적이고 실효성 있는 검찰 개혁을 기대한다.

朝鮮日報

이석수 입 막으려고 갑자기 사표 수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장·차관 워크숍에서 “최근 일부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와 부적절한 언행은 국민 가슴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시중엔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의구심이 커져 있다. 어떤 배경이 있길래 대기업에서 단번에 800억원 가까운 돈을 모을 수 있었는지, 박 대통령과 가깝다는 최순실씨가 단골로 다니던 스포츠마사지센터 운영자가 K스포츠 재단 이사장이 된 것은 우연인지 등이다. 최씨는 박 대통령의 의원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정운희씨 전 부인이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해명은 하지 않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말만 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먼저 하고 ‘공직자의 비리와 부적절한 언행’을 지적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박 대통령은 23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결과 유출 의혹으로 사표를 제

출한 지 거의 한 달 만이다. 한 달 동안 수리하지 않던 사표를 왜 갑자기 지금 수리하는지도 궁금하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감찰관은 우병우 감찰만이 아니라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내사도 했다고 한다. 이 감찰관이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된 것도 이 때문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 감찰관은 오는 30일 국회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채택돼 있었다. 따라서 국정감사에서 이 두 재단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될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 감찰관의 사표가 수리됨으로써 그는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결국 갑작스러운 사표 수리가 이 감찰관의 입을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지만 청와대가 국민이 고개를 끄덕이게 자조지종을 설명하지 않으면 이런의 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것이다.